



환경보전 시책방향

황홍석 / 환경청 환경정책국장

1. 환경문제의 대두와 환경정책의 발전

○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중점 국가 목표로 하여, 몇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국가의 인적·물적자원이 경제발전에 집중적으로 동원됨에 따라 환경보전에는 적절한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으며, 그 결과 경제개발의 추진속도에 비례하여 환경오염문제가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본격적 대응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80년 개정·공포된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환경권이 규정되고,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환경청이 설치되었다. 또한 1982년부터 시작된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처음으로 환경보전부문계획을 포함, 환경정책의 방향을 "경제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에 두고 본격적 환경보전시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그간 환경청은 전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통하여 전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의 제고와 함께 국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주요도시의 대기질 개선 대책, 전국하천의 수질개선, 그리고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시책등을 펴왔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에 6개 환경지청을 설치

정부의 환경시책과 환경행정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데에 궁극적 목표를 두고있다.

하고, 환경관리공단을 발족시키는 등 환경보전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와 무연휘발유의 생산보급, 정유회사의 탈황시설 설치, 수도권 쓰레기의 대단위 해안 매립방안의 추진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금년도에는 이러한 제반시책을 기반으로하여 올림픽지원 환경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건에서 서울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지게 뒷받침하였다.

○ 앞으로 우리의 경제가 양적·질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국민의 생활이 윤택하게 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팽창되는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제반정책도 개발과 보전의 실질적인 균형·조화를 기초로 해야 할 것이며,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에 주어지는 정책적 우선순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환경시책의 내용

정부의 환경시책과 환경행정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데에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초를 살펴보면, 첫째, 환경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 및 환경행정의 공개로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펴 나감으로써 환경보전의 생활화와 전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둘째,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제토록 지도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기업의 환경보전책임을 강화하고,

셋째, 정부는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오염요인의 제거 및 오염된 환경의 치유에 주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같은 환경시책의 기초아래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 시책의 내용을 부문별로 나누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보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도.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정부가 규제행정만 강화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 기업인 그리고 정부의 각종 시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공직자 모두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각기의 일상생활과 소관직무의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때에 소기의 성

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환경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 홍보·제도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TV, 라디오,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 중·고등학교의 환경교육교과 개선, 각종 직장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통한 환경교육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환경오염의 실상을 공개하여 오염피해자인 동시에 원인자인 국민의 협조와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 협회, 소비자보호단체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가 각종 환경보전 홍보생활을 실시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및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심사 강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악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예상되는 악영향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악영향의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이래 현재까지 총 300여건에 달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관련대책을 강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여 현행 평가제도는 평가기술의 미흡,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 곤란, 주민참여의 미실시 등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청은 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평가대상사업을 종래 공공부문의 개발 사업에 한정하던 것을 1987년부터는 민간의 개발사업도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서 평가제도를 확대하였으며, 평가대상사업의 유형별로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 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여 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이를 평가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째, 자연생태계 전국 조사 및 보전대책의 수립

전국토를 대상으로 생물의 생육 환경, 동·식

물의 분포상황, 자연의 변화상태 등을 파악하여 자연생태계보전 대책과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해 '82-'85년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86년부터 자연생태계 전국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동 조사는 전국을 육역, 육수역, 해역으로 나누어 동·식물의 서식분포, 희귀 및 멸종위기 생물, 식물, 지형·토질 등에 걸쳐 년차적으로 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9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90년까지 자연생태계 전국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기초로 자연생태계 보전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네째, 도시대기오염 요인의 근원적 제거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각종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펴가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아황산가스에 대하여는 유류 및 연탄이 주 발생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0년을 목표로 3개 정유회사에 원유의 탈황시설을 설치 추진중이며, 저유황유의 공급을 전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정용 난방 연료인 연탄은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어, 가정 연료의 대체가 긴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먼저 여유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연료를 연탄에서 유류나 가스로 대체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서울등 대도시의 영업, 업무, 공공용시설은 청정 연료를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서울의 경우, 대상 건물의 반 이상이 이미 보일러 시설 대체를 끝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급증하고 도시 스모그의 주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1987. 7월부터 저공해자동차 및 무연휘발유의 생산·보급을 시작하여, 88. 9월말 현재 저공해 자동차는 전휘발유 차량의 26%를 차지하고 있

다. 이와 아울러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지하시설의 환경관리개선 방안 추진

요사이 우리나라 도시에는 지하상가, 지하철역, 지하도, 지하주차장, 터널등의 지하공간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의 공기오염은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 환경청은 이러한 지하시설내 환경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시설내 환경관리를 위한 지침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러 부처에 분산된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지하시설 환경관리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중금속물질을 비롯한 지하공간의 유해물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중에 있는바, 이 결과에 따라 세부 추진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전국하천 정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전국의 하천 수질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고, 깨끗한 하천공간 및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3,900여개 하천을 대상으로한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를 위하여 환경청에서부터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이르는 사업추진체계를 확립하여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하천정화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전국하천을 173개 수역으로 구분하여 수질환경기준을 차등 설정하고 수역별 현황, 토지이용 계획, 수역내 환경기초시설 계획 등을 감안하여 목표수질 달성기간을 책정하였다.

오염이 특히 심한 공단직하류 하천 및 도시관류 하천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을 단기간내에 개선한다는 데에 역점을 두고 하수처리장, 공장폐수처리장,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의 확대 건설, 하상정비, 준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던 호소수질 환경기준을 하천과 분리하여 별도 계경코자 관련법령을 정비중에 있으며, 전국의 상수 취수원에 대하여 오염요인을 파악 분석하여 상수보호구역내의 오염원 규제강화, 시설및

행위제한 강화등 상수원 보호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일곱째, 해양오염 방지 대책

전국 11개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인바 이에 의하여 해상공원등 절대보호해역 및 오염취약해역에 대하여는 내륙으로 부터의 오염 최소화, 석유 탐사해역의 기름확산 방지대책, 적조예방 대책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덟째, 폐기물 종합관리체계 확립

폐기물 발생량의 감량, 폐기물의 수거·운반 처리체계 확립 및 재생가능 폐기물의 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분뇨처리장 확충,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특정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의 권역별 설치 수도권외의 광역 해안매립지 조성사업은 87년부터 92년까지 총 사업비 3,500억원을 투자하여 630만평에 이르는 김포지구 간척지에 조성되는 사업이다.

아홉째, 유해화학물질 관리

국내에 유통되고있는 합성화학물질중 3,000여종에 이르는 유해성 물질과 농약, 비료 등영농화학물질의 관리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화학물질의 독성 및 잔류성등의 시험기준을 마련 적용하고 있다. 이외는 독극물판매업소 지도, 점검,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강화 시행 하고 있다.

3. 당 면 과 제

첫째, 환경행정기구의 위상 확립

정부조직중 청의 기능을 유형별로 분류 하면 철도청, 조달청과 같은 정부기업적 성격을 갖는 관서, 공업진흥청, 농업진흥청과 같은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관서, 국제청, 관세청, 병무청, 특허청과같은 순수 집행업무 또는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관서가 있고, 산림청, 수산청,항만청, 과 같이 업무의 대상영역이 뚜렷한 관서도 있다.

이와같이 일반적인 정부조직 관리상 청단위의 기구에서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

으나, 유일하게 환경청은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부서이면서 이를 실제 시행하는 시행기능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이것은 보통부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수 있는것인데 이러한 부의 기능을 수행 하면서도 보사부 산하의 외청의 지위에 있는 관계로 개발정책을 다루는 여타부처와 동등한 차원에서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환경행정은 종합행정적 특성을 갖고있어 많은 부처에 의하여 시행되므로 이러한 여러 부처의 환경관련 시책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사정이나 이 역시 청 단위의 조직으로는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위에 말한 두가지 문제 즉 환경청의 위상 및 환경시책의 종합조정 기능강화를 검토하고 있거나와 국회와 정부 공히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조만간 개선대책이 강구될 전망이다.

둘째, 환경법체계 정비

현행 환경관계법의 체계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된 환경권 규정 밑에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독극물관리법이 있어 종합법 체계와 개별적 체계가 혼합된 형태이다. 이중 환경보전법은 환경보전의 기본이 되는 사항외에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용부담, 분쟁조정, 피해보상, 환경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최근 산업의 고도화에 의한 오염의 다양화 현장에 적절히 대응하기 곤란하며, 다원화 하는 환경행정 상호간의 효율적조정, 연계가 어렵게 되고 있다.

이에 환경청에서는 현행의 환경보전법을 분법화 하여 환경보전의 기본정책과 시책등을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밑에 환경행정의 분야별로 환경피해분쟁 조정, 대기, 수질, 소음, 진동등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현재 관계법의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환경투자의 효율화와 재원 확보

하수처리장, 공단폐수 공동처리장, 분뇨처리장, 유해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

시설의 건설, 운영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유되어 이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그 사업 주체가 건설부, 환경청, 각 지방 자치단체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어 계획적인 투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곤란한 실정이다. 계획적인 환경투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간의 비용부담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국가는 폐하수 및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에 중점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에 주력하며, 기업은 개별 방지시설, 자체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등을 위한 투자를 담당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관련시책을 펴 나가고 있다.

이와같은 비용부담 원칙에 의한 재원확보체제 확립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방지산업 비용부담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금년초에는 장기간에 걸친 주요 강 유역별 용역조사 사업을 기초로 하여 2001년까지의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년차적으로 이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계속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4.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기본정책으로 삼아 국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부시책을 강화하여 온 결과 이제 어느정도 환경보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고, 상당한 경험도 축적 하였다. 2000년대를 향한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대도시의 대기질 및 주요 하천의 수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해양오염방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환경분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이 분야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며 환경문제의 규명 및 그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야 할 것이다.